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한은, 2014년 경제성장률 4.0%로 상향 전망
- 이 슈 : (경제)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

■ 노후생활

- 테 마 : 장수리스크와 공·사적연금의 역할
- 세 심 록 : 모든 백성은 군자의 풍화를 입는다!
- 북 리 뷰 : 바잉브레인

□ 동향

○ **한은, 2014년 경제성장률 4.0%로 상향 전망(3.8% → 4.0%)**

- 한국은행은 2014년 국내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3.8%)에 비해 0.2%p 상향한 4.0%로 전망

- **소비** : 명목임금 상승, 물가안정,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지만 가계부채 부담, 높은 전세가격 등이 소비를 제약하여 전년대비 3.1% 증가 전망
- **투자** : 선진국 중심의 경기회복,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성장률이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건설투자는 SOC예산 축소 등으로 토목부문의 회복이 부진하여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대외거래** : 상품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전년대비 6.5% 증가 예상

○ **노동생산성 3년 만에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99.5(2010=100)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201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 **제조업** : 전기장비(-3.7%), 금속가공제품(-3.2%) 등의 생산성은 감소하였으나 의료·정밀·광학기기(9.6%), 화학물질·화학제품(4.3%), 자동차·트레일러(3.0%) 등의 생산성은 늘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0.1% 증가
-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7.1%), 보건·사회복지업(3.2%) 등에서 노동투입 증가 대비 산출량이 크게 늘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98.7로 전년대비 1.4% 증가
- **건설업** : 건설업 노동생산성은 82.4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2012년에 전년대비 9.2% 감소한 것을 일부 만회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 2012 | 2013 | 2013 | | | | 2014 | | | | | |
|----------|------------|---------|---------|---------|---------|---------|---------|---------|---------|---------|---------|---------|
| | 연간 | 연간 | 2/4 | 3/4 | 4/4 | 12월 | 1월 | 2월 | 3월 | 4/7 | 4/21 | |
| 실물 지표 | GDP성장률(%) | 2.3 | 3.0 | 2.7 | 3.4 | 3.7 | - | - | - | - | - | |
| | 제조업생산(%) | 0.7 | -1.6 | 0.0 | 0.1 | 1.8 | 2.6 | -4.5 | 4.5 | - | - | |
| | 소비자물가(%) | 2.2 | 1.3 | 1.2 | 1.4 | 1.1 | 1.1 | 1.1 | 1.0 | 1.3 | - | |
| | 실업률(%) | 3.2 | 3.1 | 3.1 | 3.0 | 2.8 | 3.0 | 3.5 | 4.5 | 3.9 | - | |
| | 경상수지(억달러) | 508.4 | 798.8 | 208.0 | 237.8 | 248.4 | 68.8 | 32.9 | 45.2 | - | - | |
| 금융 지표 | 국고채(3년)(%) | 3.13 | 2.79 | 2.67 | 3.01 | 2.90 | 2.94 | 2.89 | 2.85 | 2.87 | 2.88 | 2.87 |
| | 원/달러(원) | 1,126.8 | 1,095.0 | 1,122.2 | 1,112.2 | 1,062.1 | 1,056.7 | 1,064.8 | 1,071.3 | 1,070.9 | 1,069.7 | 1,043.8 |
| | 코스피지수(P) | 1,930.4 | 1,960.5 | 1,932.6 | 1,917.7 | 2,009.3 | 1,988.3 | 1,948.2 | 1,937.3 | 1,952.4 | 1,976.7 | 1,996.6 |

주 : GDP성장률,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4/7~4/18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¹⁾

○ 자영업 가계부채의 분석 필요성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구당 가계부채도 10,0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크다.

○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

< 채무상환능력 측면 >

①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및 이자비용이 임금근로자 가구의 두 배에 육박한다. 가계부채는 2013년에 각각 10,016만원과 5,169만원이고, 年이자비용은 각각 526만원과 245만원이다.

② 자영업자 가구는 주로 사업자금(23.6%)과 생활비 마련(31.1%)을 위해 대출 받는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는 상대적으로 교육비(26.4%)와 부동산 구입(20.9%)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③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소득의 증가세와 대조적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2012년 4,425만원에서 2013년 4,397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4,517만원에서 4,70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④ 앞의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 자영업자 가구의 채무상환비율($\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은 31.5%에서 34.9%로 3.4%p 올랐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21.5%에서 24.3%로 2.8%p 상승하였다.

⑤ 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는 9,927만원에서 11,760만원으로 18.5%나 증가한 반면, 非베이비붐세대는 9,187만원에서 9,163만원으로 0.3% 감소하였다.

< 부채구조 측면 >

⑥ 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신용대출액은 1,327만원에서 1,678만원으로 26.4% 커졌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822만원에서 889만원으로 8.2% 증가하였다.

⑦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비은행권 부채의존도가 커졌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총부채 중 비은행권 비중이 24.1%에서 26.9%로 2.8%p 상승하였고, 임금근로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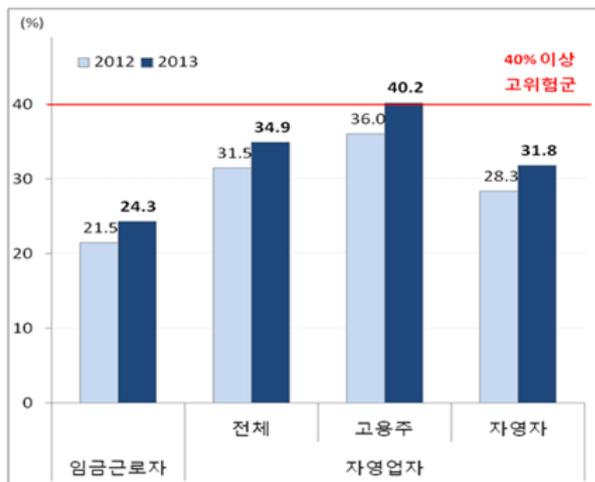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14-14호 (2014. 04. 04.) 에서 발췌 요약.

는 20.7%에서 23.4%로 2.7%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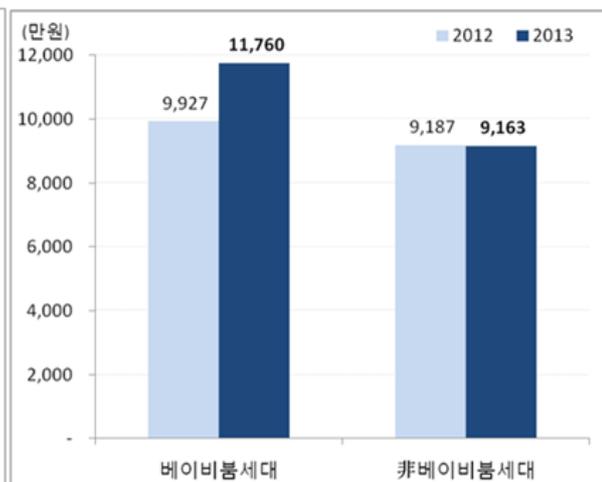
⑧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원리금분할상환이 늘었으나, 여전히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높다. 금융대출 상환방법 중 만기일시상환의 비중은 40.6%에서 37.9%로 2.7%p 감소한 반면, 원리금분할상환은 29.8%에서 31.1%로 증가하였다.

⑨자영업자 중에서도 다중채무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다중채무 가구는 가계부채가 17,913만원에서 20,890만원으로 16.6% 증가한 반면, 非다중채무자가구는 7,855만원에서 7,222만원으로 8.1% 감소하였다. 채무상환비율도 다중채무가구가 52.5%에서 57.2%로 4.7%p 상승하여, 非다중채무가구가 27.3%에서 28.9%로 1.6%p 상승한 것보다 더 악화되었다.

<중사상지위별 채무상환비율 현황>



<자영업자 중 베이비붐세대, 非베이비붐세대의 가계부채>



○ 시사점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고용주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 베이비붐세대 가구와 다중채무가구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고용주 가구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안정적 사업소득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업자 가구를 위해서는 과당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은퇴한 베이비붐세대 가구가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준비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다중채무가구의 경우, 성실상환을 전제조건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이슈 : (산업)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대응 전략의 모색²⁾

○ 개 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성장의 질적 수준도 효율성이나 자본스톡보다는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1995년 1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최근에서야 선진국 기준의 하한선이라 할 수 있는 2만 달러대를 간신히 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신흥공업국들이 우리 경제를 추월하여 경제적 위상(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2004년 11위를 정점으로 후퇴하여 현재 15위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저속 주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잠재성장률 4%의 경제적 성과 목표 하에『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 전략

(10년 후 잠재성장률 전망) 경제전문가들은 1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예측한다. 응답자의 65.2%가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3.5% 수준에서 10년 후에는 2%대(응답자 평균 2.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부 구간별로는『2%대 초반』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3.3%로 가장 높았다.

(10년 후 국민소득 전망)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 3만 5,000달러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62.5%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5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4만 달러 이상을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경제의 위상 전망) 10년 후 한국 경제는 현재 경제력 (G15)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현 경제 규모(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15위인데, 10년 후에는 현재 경제력 수준(G15)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경제 강국으로 진입 - G10 이내 진입』이 22.2%를 기록하였다.

²⁾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 14-07호 (2014. 02. 05) 에서 발췌 요약.

(대내외 불안 요인 전망)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 불안요인으로는『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대내 불안 요인으로는『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지목한다. 대외요인으로는『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이 가장 많은 44.4%의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대내요인으로는『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54.2%)』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경제발전전략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전망)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선진국 형으로의 전략 전환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은 28.2%에 그쳤다.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의 중심)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가「6 : 4」, 수출과 내수가「5 : 5」의 비율로 나타났다.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성장』61.4%,『분배』38.6%로 성장이 분배를 다소 상회하였다. 한편,『수출(49.3%)』과『내수(50.7%)』의 비율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역할) 정부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한다. 한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축소』해야 한다가 5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현 수준 유지』까지 포함할 경우 86.1%가 최소한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주력 산업의 한계와 신성장산업의 필요성) 현재의 주력 산업은 5년 후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에 대해서『5년 후』를 응답한 비율이 61.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2.5%가『신성장산업 발굴(62.5%)』을 응답하고 있다.

○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전략의 모습은 첫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둘째, 경제 강대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부문의 확대를 경계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성장이 요구된다. 다섯째, 대규모 투자의 수요처가 되고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의 발굴이 시급하다.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 테마 : : 장수리스크와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강화

○ 요약

급속한 고령화는 늘어난 은퇴기간에 대비하여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할 근로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수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음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로 노후소득 준비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21년 사이에 연간 0.43세씩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정년연장만으로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부양의식 약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 기능이 약화로 이해되고 이는 전통적인 노후소득원인 사적이전소득의 감소로 인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줌

공적소득보장은 노후소득을 증대시켜 장수리스크를 완화할 유인으로 작용하나, 공적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재정문제와 함께 그 급여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증가하는 장수리스크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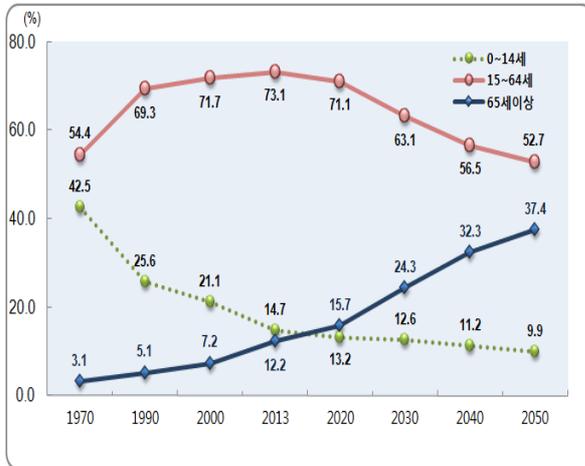
이에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현재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 기능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보완으로서 사적연금의 확대 보장을 통한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고령화와 부양의식 약화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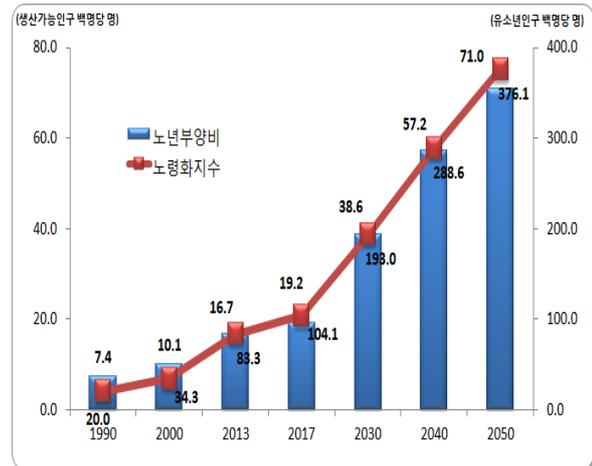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013년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고령자 수/총인구 수)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012년 기준 OECD 평균은 14.87%)
 -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통계청(2013)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는 83.3으로, 2017년에는 104.1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 >



자료 : 통계청(2013), 2013 고령자통계.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



자료 : 통계청(2013), 2013 고령자통계.

- 주요 선진국과의 고령화 추이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2010년 기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향후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됨

- 일본(23%)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11.0%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약 30년 이후인 2040년 경에는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0~2040년 동안 고령화 수준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나라는 한국 2.9배, 브라질 2.6배, 중국 2.6배, 인도 2.0배임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 될 것임을 시사함

< 주요 선진국과 BRICs 고령화율 >

(단위 : %)

| 연도 | 한국 | 미국 | 프랑스 | 영국 | 독일 | 일본 |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
|-----------|------|------|------|------|------|------|------|------|------|------|
| 1990 | 5.1 | 12.5 | 14.1 | 15.7 | 15.0 | 11.9 | 4.5 | 10.2 | 3.9 | 5.8 |
| 2000 | 7.2 | 12.4 | 16.0 | 15.8 | 16.3 | 17.2 | 5.5 | 12.4 | 4.4 | 6.9 |
| 2010 | 11.0 | 13.1 | 16.8 | 16.6 | 20.8 | 23.0 | 6.9 | 13.1 | 5.1 | 8.4 |
| 2020 | 15.7 | 16.6 | 20.3 | 18.9 | 23.1 | 28.6 | 9.5 | 14.8 | 6.3 | 11.7 |
| 2030 | 24.3 | 20.1 | 23.2 | 21.7 | 28.2 | 30.7 | 13.6 | 18.1 | 8.2 | 16.2 |
| 2040 | 32.3 | 21.2 | 25.4 | 24.0 | 31.8 | 34.5 | 17.6 | 18.3 | 10.2 | 22.1 |
| 2040/2010 | 2.9 | 1.6 | 1.5 | 1.4 | 1.5 | 1.5 | 2.6 | 1.4 | 2.0 | 2.6 |

자료 : UN(201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 통계청(2013), 2013 고령자통계.

-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인인구로의 편입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됨

-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가 아직 노인인구로 편입되지 않고 있어 젊은 국가에 속하나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로 편입이 종료되는 2039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31.66%로, 2012년에 비해 3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기대여명의 급증

-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0세 기준)은 지난 21년 동안 9세 증가(연 0.43세 증가)
 - WHO에 따르면 2011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평균 81세(남자 77세, 여자 84세)이며, 1990년에 72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21년 사이에 9세나 늘어난 것으로 연간 0.43세씩 기대여명이 증가해 왔음
- 2011년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17.4년)보다 여자(21.9년)가 4.5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추정됨
 - 70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13.7년)보다 여자(17.6년)가 3.9년 더 높게 나타났으며, 80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7.6년)보다 여자(9.9년)가 2.3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기대여명 (65세 이상, 2011년) >

(단위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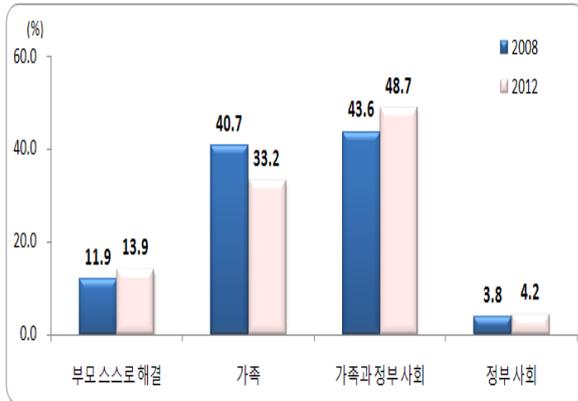
| | 전 체 | 남자(A) | 여자(B) | 남녀차이(B-A) |
|-----|------|-------|-------|-----------|
| 65세 | 20.0 | 17.4 | 21.9 | 4.5 |
| 70세 | 16.0 | 13.7 | 17.6 | 3.9 |
| 80세 | 9.2 | 7.6 | 9.9 | 2.3 |

자료 : 통계청, 「생명표」 2011; 통계청(2013), 2013 고령자통계.

○ 부양의식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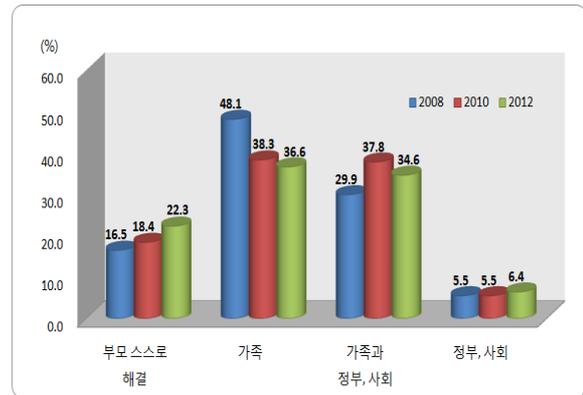
- 15세 이상 인구는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48.7%로 가장 많았음
 -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2008년 40.7%에서 2012년 33.2%로 감소하였으나,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부모 부양 책임자로 '가족' 중에서는 '자식 중 능력 있는 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든 자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하여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36.6%)',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34.6%)', '스스로 해결(22.3%)' 순으로 나타남
 -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5세 이상 인구에 비해 비율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 부양 중심에서 국가·사회부양 중심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15세 이상 인구 대상)



자료 : 통계청(2012), 2012년 사회조사 결과.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65세 이상 대상)



자료 : 통계청(2013), 2013 고령자통계.

-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부양의식의 약화는 노동수급의 불균형 및 복지재정의 확대 등 국가재정 및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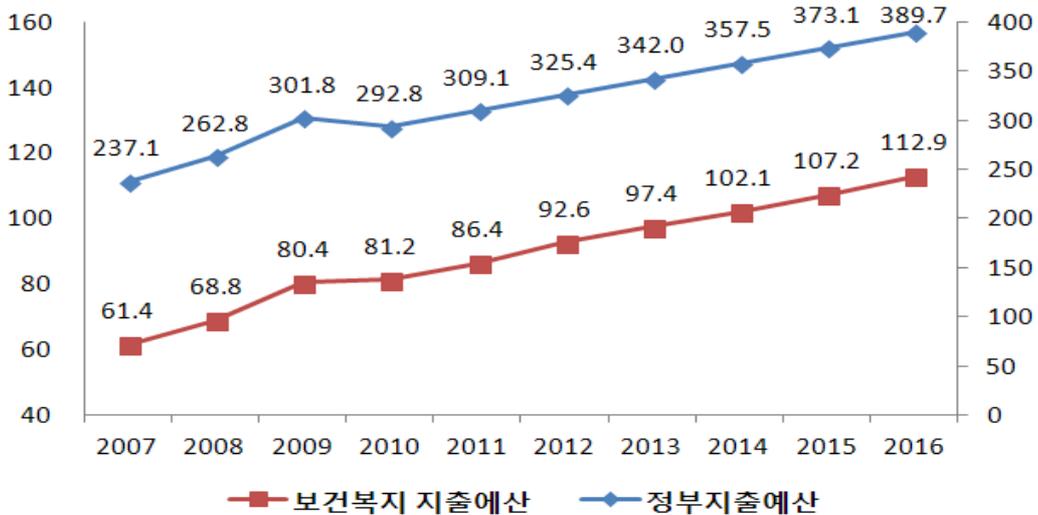
□ 공적소득보장 한계와 사적기능 강화 필요

○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공적소득보장의 한계

- GDP대비 보건복지 지출규모는 현재 OECD국가 중에서 하위(10.0%)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률이 급증³⁾하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지출예산 대비 복지지출 예상도 지속증가
 -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는 2007년 61.4조원에서 2016년 112.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 이어서 노후보장에 대한 정부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정부예산 중 복지 분야는 97.4조원(2013)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이 중 공적 연금이 33.1조원(3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적연금은 재정불안정과 낮은 급여수준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
 - 공적연금은 국가재정 불안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급여수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028년까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40%로 감소)여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으로서의 한계도 동시에 존재함

3) 1999년 3.3%에서 2010년 11%로 급증추세(보사연, 2011)

< 정부지출예산과 복지지출예산 추이 >



주 : 국회예산정책처(2013).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혁이 있었으나 미흡

- 현행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의 재정안정화 중심으로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안정화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한 바 있으나, 여전히 2060년에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재정문제를 안고 있음
- 특히,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이미 수지적자에 직면한 상태이고, 사학연금도 2033년 적립기금 고갈이 예상됨
- 즉, 공무원연금은 '93년부터 정부보전금을 충당하기 시작하였으며, '13년 정부 보전금은 약 1.9조원이고, 군인연금은 이보다 이른 '73년부터 정부보전금이 충당되기 시작하여 '13년 정부 보전금은 약 1.4조원 수준임

< 공적연금의 재정전망 >

| 비고 | 비고 | 수지적자 | 기금소진 | 출처 |
|----------------|-----------|--|----------------------|-------------------|
| 국민연금 | | 2044년 : -5.4조원 | 2060년: 적립기금 -214.2조원 | 국민연금재정추계(2008) |
| 특수 지역 연금 | 공무원 연금 | 1993년부터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 (정부보조금 2013년 1.9조원 → 2020년 6.3조원) | | 국회예산정책처 (2013) |
| | 군인연금 | 1973년부터 정부보전금으로 충당 (정부고전금 2013년 1.4조원 → 2020년 2.2조원) | | 국회예산정책처 (2013) |
| | 사학연금 | 2021(-25억) | 2033 (적립기금 0원) | 사학연금재정재계산(2010) |

주 : 국회예산정책처(2013), 사학연금재정재계산(2010), 국민연금재정추계(2008).

-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금액은 약 50~60만원⁴⁾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어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생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부 2인기준 최소생활비는 월 117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70만원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확대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개편 예정에 있으나, 정치적으로 미해결 상태에 있음
- 공적연금 확대 보장은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정안정화 문제를 안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와 장수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기능의 확대 개편을 통한 공사연금의 활성화가 요구됨

□ 장수리스크 개념과 활용

○ 장수리스크는 예상수명보다 실제수명이 길어서 발생하는 노후의 생존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음(강창희, 2012; 김대환 외, 2012; 백화종 외, 2011)⁵⁾

- 즉, 예상은퇴기간에 비해 예상하지 못한 은퇴기간이 길어질수록 장수리스크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text{장수리스크} = \frac{\text{예상하지 못한 은퇴기간}}{\text{예상 은퇴기간}}$)

- 예상은퇴기간=예상수명 기댓값⁶⁾-은퇴연령
- 예상하지 못한 은퇴기간⁷⁾=사망연령-예상수명 기댓값

○ 고령화와 부양의식의 약화는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⁸⁾

- 고령화 변수인 고령화지수는 장수리스크에 정(+)⁹⁾의 영향을 미치며 부양의식은 장수리스크에 부(-)¹⁰⁾의 영향을 미침
 - 고령화 변수는 '전체 가구 대비 노인가구 비중'으로 정의되므로 노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면 장수리스크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부양의식 변수는 '가구경상소득 대비 가구사적이전소득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적이전소득의 증가(감소)는 장수리스크를 감소(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4) 평균 소득대체율 25%~30%로 가정하고 평균소득자의 소득을 약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50~60만원의 월 연금급여액을 산출 할 수 있음.

5)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2012),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 방안, 경영보고서 2012-4. 보험연구원, 2012. 백화종, 석상훈, 김현수, 이은영(2011), "한국인의 은퇴준비와 노후소득 수준의 적절성 평가,"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프로젝트 2011-02. 강창희, "2012 은퇴전략포럼," 발표자료, 2012.9.12.

6) 개인이 예상한 자신의 수명.

7) 한 개인의 실제연령이 당해 연도의 평균수명을 초과하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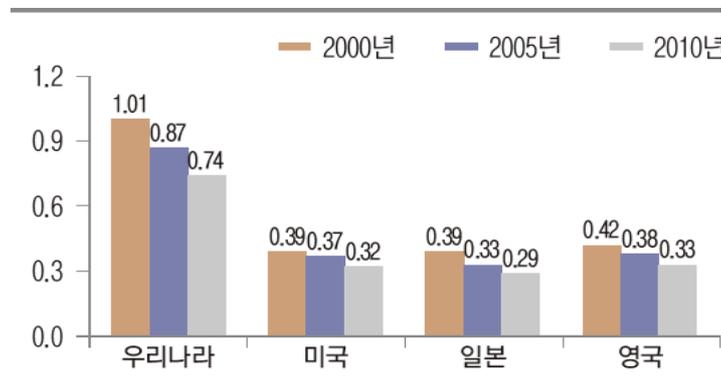
8) 강성호 (2013), 장수리스크와 사적연금의 역할, 2013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재정학회.

○ 장수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강화 필요

- 장수리스크 대응에 있어 공적연금의 재정적 여력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생명표」, 「장래인구추계: 2010~2060」의 최신 통계치를 반영하여 장수리스크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의 장수리스크는 0.74로 나타나 실제 은퇴기간이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평균 74%가량 긴 것으로 분석됨
- 동일 방식으로 산출한 미국의 장수리스크 0.32, 일본의 0.29, 영국의 0.33과 비교할 때, 약 2.5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임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수리스크가 높은 이유는 급속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은퇴기간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임

<장수리스크 국제비교 및 변화 추이>



□ 시사점 및 결론

○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 소득보장 기능 축소로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필연적임.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및 소득계층별 차별화 전략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세제개편에 따라 연금과세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입 유인이 줄어든 점에서 공제상한 확대 등 추가적인 가입유인 확대 방안이 모색 됨
 - 납세규모가 매우 적어 세제혜택으로는 가입유인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함

- 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인한 잉여재원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 필요
 -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연령거치연금(ALDA)에 대해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거나, 현금유동성을 강화한 종신연금 확대보급 및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고 가격경쟁력을 제고한 표준하체연금 등에 대한 출시 등도 검토할 시점임
 - 연금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자의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 연금소득에 대한 다각도의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사연금제도가 조화하여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공적연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기능에 보다 충실하고, 사적연금은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소득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연금산업의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도 필요함
- 탄력적 정년연장제도 도입을 통한 장수리스크에 대비
-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로 노후소득 준비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금피크 설정 및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되어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함
 - 단순히 법정은퇴연령에 다다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것은 전문인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업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음
- 노인일자리 확보 등을 통한 장수리스크에 대비
- 급속한 고령화는 늘어난 은퇴기간에 대비하여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할 근로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저소득 퇴직자에 대해서는 제2의 노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보를 통해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있음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3775-9033, ksh0515@kiri.or.kr)

□ 세심록(洗心錄)

○ 모든 백성은 군자의 풍화를 입는다!

‘논어(論語)’의 ‘안연편(顏淵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온다.

‘子爲政 焉用殺 子欲善而民善矣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必偃’

이 글은 춘추시대(春秋時代)⁹⁾의 대학인 공자와 당시 노(魯)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계강자(季康子)가 정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계강자의 ‘무도한 자들을 죽이고 도가 있는 자를 공직에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변으로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다.

‘군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찌 살인이라는 수단을 쓸 수 있는가? 군자가 스스로 선해지고자 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선해질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으니, 풀은 부는 바람에 스스로 따르게 마련이다’

이 답변에는 술선수범이라는 지도자가 된 자의 덕목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권력을 가진 위정자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진 권력을 다 휘두르면서도 백성들에게 권력에 대한 순종과 정도를 걸을 것을 아무리 요구해 봐야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는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부하나 동료 또는 가족들에게는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할 때가 있다. 가정이나 회사 혹은 사회에서 개인의 입지가 높아졌을 때 지나 온 날들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은 채 타인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적어도 우리가 몸담은 조직과 사회는 일개 개인의 권력과 의지로 발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자의 술선수범과 성실함이 조직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명예로운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면 스스로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라.

- 웨일스 속담

9)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경~403년경으로 공자의 전성시대이자 노자와 묵자가 공존하던 시대.

□ 북리뷰

- 제목 : 바잉브레인¹⁰⁾

- 저자 : A.K프라딕

- A.K프라딕은 UC버클리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뉴로마케팅 전문기업인 뉴로포커스를 창립하여 신경과학을 마케팅, 광고, 메시지 전달 등에 적용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음. 2009년 미국광고연구재단의 '위대한 정신' 혁신상 수상, 2010년에는 미국-인도 비즈니스 서밋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

○ 주요 내용

- 이 책은 인간의 두뇌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신경학자들이 밝혀낸 사실과 마케팅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서술

- 뇌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정보의 많은 부분을 잠재의식적으로 처리하며 소비자는 자신이 제품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함

- 원시적인 두뇌

- 10만 년 전에 완성된 인간의 두뇌는 현대 삶의 속도와 과도한 자극만으로도 벅찬 상태
이므로, 광고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처리하기 쉽고', '새로우며', '누군가와 의 시선을 마주치게 하고', '쾌락이나 보상을 제시'해야 함
- 인간의 오감(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은 잠재의식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우리의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침
- 상대적으로 쉽게 산만해지는 노인의 뇌와,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여성의 뇌에 접근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 뇌 속의 욕망을 끌어내는 뉴로마케팅

- 뇌과학이 마케팅과 접목된 '뉴로마케팅'은 제품·서비스를 경험하는 소비자의 뇌를 관찰하여 언제, 어느 부분에서 소비자의 만족이 극대화되는지 연구하고 활용하는 학문
- 마케팅의 효과는 제품, 광고 등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주의)', '소비자가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감정적 개입)', 그리고 '소비자가 기억하는 정도(기억)'으로 측정 가능
-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관련성을 느끼고, 잘 기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구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 제품·브랜드: 생필품이라면 형태, 기능, 이익을 어필하고, 사치품이라면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분, 가치 등을 강조
- 포장 디자인: 익숙한 이미지나 독특한 서체를 활용하고 잡기 쉽게 디자인할 것
- 매장 환경: 날카로운 모서리를 배제하고 자연적인 질감을 살려 꾸밀 것

¹⁰⁾ A.K.프라딕 지음, 서영조 옮김, "바잉브레인", 한국경제신문, 2013.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 · 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